

〈토 론 문〉

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

강만옥 선임연구위원

□ 에너지 가격·세제 정책방향 평가

-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에너지 가격·세제 정책방향은 에너지 공급 정상화 및 효율적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현안들을 시장논리로 적절히 대응
- 공급원가 및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방안 제시는 에너지 공급자 및 수요자의 공정성(형평성)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
 -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,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전환 등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체계 왜곡 해소에 기여
 - 계시별 요금제 전환,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 및 소비자 자율형 녹색요금제도 도입 등은 효율적인 전기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기여
 - 사회적 비용 반영을 통한 원전의 제세부담금 체계 및 수송용 연료의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 구축, 화석연료 보조금 및 비과세 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국민안전 향상 및 환경오염 감축에 기여
- 에너지 가격·세제 개편방안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국민수용성 확보 노력은 진일보한 시장친화적(수요자 및 공급자) 에너지 정책으로 평가
 - 또한 에너지 소외지역·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(예: 등유, 프로판 개소세 완화 등) 노력은 소득분배 및 Justice 향상에 기여

□ 보완적인 정책 방향

- 미세먼지 종합대책(2017.9.26.)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에너지 가격·세제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제고
 -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% 감축
 - 부문별 주요대책을 보면, 발전부문(발전용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,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, 산업부문(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확대), 수송

- 부문(LPG차,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, 경유차 비중 축소) 제시
-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에너지 가격·세제 정책방향과 미세먼지 종합대책과의 연계 방안 마련

○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 반영 강화

-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을 초과하고 있음. 이는 과세 수준이 사회적 비용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Tax로 인한 교정적 효과 강화 및 관련세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
- 용도별, 연료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송용 에너지 대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비수송용 에너지(예: 석탄, 천연가스 등)의 세 부담 강화 방안 마련
-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입 활용방향(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세 부담 완화 방향,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R&D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)

○ 에너지 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가격기능 정상화

- 현재 명목 종량세액 부과 형태의 과세로 인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세 부담이 낮은 실정
- 이는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교정기능 저하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유도
- EU 국가는 수시로(주로 분기별) 종량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

○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7% 목표 달성 방안 마련 필요

- OECD는 「한국 환경성과평가보고서」(2017)에서 에너지세와 전기요금 개혁,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제시
- 탄소세 도입 방안 마련(단, 산업 및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 참여기업은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일정부분의 세 부담 감면 병행)
- 일본은 전기요금에 ‘재생에너지발전 촉진 부과금’을 부과하여 석탄, 원자력발전 대비 추가 상승비용을 상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

○ 친환경 차량의 연료 및 차량과세 방안 도입

- 전기차·가스차(CNG차)·수소차 과세의 LCA적 분석 및 이를 통한 수송용 연료·차량 과세체계 개편